

7.8 THAAD 배치 결정과 대중 정책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정책 제언

7.8조치(THAAD배치공식선포)로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해 보임

- 현 상태에서 충분한 소통과 이해 없이 사드 배치를 단행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및 이익 중심의 대 중국 접근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 사드 도입은 단지 우리의 필요라는 관점을 넘어 국제체제 차원의 이해 갈등이 불가피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
- 국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낙관론'이나 '무시론'은 중국의 추가적인 반응을 축진
- 중러의 입장에서는 중러 vs. 미 간의 전략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러한 갈등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 측이며, 중국의 시진핑은 자신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상황관리 위주의 정책 추진

- 우선,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임. 사드의 대중국 군사적 효용성은 수년 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도 사드문제 때문에 한중관계를 희생하지 말라는 전략 메시지를 발하고,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임
- 다음으로 중요(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대응)한 것은 사드 배치와 용도를 대북한용에 한정 짓는 프레임유지를 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임
- 미국과 타결한 "북핵 대응 원칙, 1개 포대 미국 비용으로 배치"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용도의 변경이나 배치 및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 정부와의 새로운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함. 이 새로운 협상의 변경사항은 한국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막대한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동의 사안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주한 미군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성의를 다하면서도, 중러가 우려하는 사드의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치이며, 한국의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임
- 다음으로 9월 5일 한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대로, 성의를 다해 중국과 외교적 소통을 추진하고 동시에 한미중 간의 소통을 통해 3국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는 타협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함. 현재 한국 정부의 논리인 '조건부 사드 배치론'은 중러의 입장에서는 수용 어려움. 이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해석될 것임
- 국방부 차원의 신뢰구축과 위기관리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공식적인 채널으로소통이 어렵다면, KIDA-CFISS 위기 관리 회의, 항산논단 회의, 상그릴라 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 측과 소통 추진

양자차원의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강화

- 동북아경제 분업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음. 이는 한중 협력의 경제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임
- 전략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의 영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추후 한중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특히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중국 국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동북아 해상실크로드의 확대방안, 지방 정부의 현황 및 환동해 협력사업 지원,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맞춤형 협력 안 제시 등 적극적인 경제 협력 안 제시로 현재의 군사안보적 대립 상황을 완화해야 함

한중 해상경계획정 협상 타결 적극 추진

- 성공의 사안을 창출하여 이 경색국면을 돌파해야 함. 이 문제의 타결은 중국에게도 해상분쟁 해결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고 한중관계 역시 해상분쟁 해결의 성공의 사례를 만드는 것임
- 이는 박근혜 정부 최대의 외교안보 업적이 될 수 있을 사안임

사드 배치를 단행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 및 이익 중심의 대 중국 접근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

사드의 대중국 군사적 효용성은 수년 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도 사드문제 때문에 한중관계를 희생하지 말라는 전략 메시지를 발하고,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임

3. 현 추이와 고려 사항

사드 체계 자체는 방어용 무기임

- 미중은 이미 서로를 감시하는 레이더·첩보 체계 구축하고 있어 사드 배치가 미중 전략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없음. 다만, 중국은 현 수준의 사드 배치보다는 향후 사드 레이더의 성능과 기술 개량을 우려하는 것임
- 사드의 대중국 군사적 효용성은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중국군의 역량을 감안할 때, 수년 내 사드의 대중국 효과는 무기력해 질 개연성 다대함
-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에 가담하는 상징적인 사안으로 인식. 따라서 현재로서는 군사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전략적인 문제임

사드 배치 결정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결정 되었음

- 그간 북핵문제 및 북한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협의와 절충의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드문제의 부상은 그 함의가 심각
-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중간 경쟁구도가 갖는 함의는 더욱 커지게 되었음. 그 가운데에서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필요한 시점

중국의 기본 태도는 등가 대응(Tit-for-Tat) 전략을 추진하는 것임. 이는 한국의 사드배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이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동시에 한중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으며, 한국과 타협하고 싶다는 중국의 속내와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함

- 현재로서는 '보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극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음
- 중국의 현실적인 목표는 사드 배치의 최대한 연기일 것임.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점점은 사드의 한반도화 임
- 한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하고 부지선정 작업 중이므로, 이 상황에 걸 맞는 초기 수준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중국 대응의 한계로 안이하게 판단해서는 안 됨
- 한국이 부지를 최종 결정,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공사 진행 및 완성, 사드 시스템 배치 완결(2017년 대선 전후)될 때까지 한국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외교안보 및 경제적 보복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대한 경제보복의 범위는 외교안보적 대한국 압박조치 수준과 더불어 자국의 산업고도화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성 하에 채택될 것으로 보임
- 사드 역량이나 수량의 확대 여부에 따라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변수로 남을 개연성 다대함

중국은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을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비추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것임

- 중국은 동북아 신냉전 상황의 도래를 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북한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자신의 강대국 외교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북한에 연루되는 상황은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 한국과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남은 상황에서 북중동맹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임. 중국에게는 실제 한중관계가 더 중요함
- 다만, 실제적인 경제이익과 결합하여 대북 경제제재는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임
- 북한 역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현재로서는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신, 자신의 독자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

향후 2016-17년, 북한, 한국, 미국 발 고강도 압박 정책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역 반발 및 미중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구조화할 수 있는 국면이 도래할 수도 있음

- 남북 관계는 추가적으로 더 긴장관계로 돌입할 개연성이 높고, 미국은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당분간 이 시기 동안은 대북 압박을 더 강도 있게 추진할 것임. 북한 역시 이러한 한미의 강도 높은 압박에 저항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임
- 향후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이 모든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정책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동맹에 가담하는 상징적인 사안으로 인식. 따라서 현재로서는 군사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전략적인 문제

중국의 기본 태도는 등가 대응(Tit-for-Tat) 전략을 추진하는 것임. 한국의 사드배치 진전 상황에 맞추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점진적으로 강화

사드 역량이나 수량의 확대 여부에 따라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중 갈등이 고조되는 변수로 남을 개연성 다대

2016-17년, 북한, 한국, 미국 발 고강도 압박 정책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역 반발 및 미중관계의 심각한 악화를 구조화할 수 있는 국면이 도래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사드 도입은 중국에게 북한 카드를 더 적극 활용하여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유혹을 안겨 줄 것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가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로 전환하는 상황을 억지해야 함

- 동북아 새로운 냉전구도의 형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부담이 커서 중러 역시 바라는 상황은 아님.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냉전체제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임
- 사드 도입은 중국에게 북한 카드를 더 적극 활용하여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유혹을 안겨 줄 것이며, 자국의 경제 및 전략 이익은 우선시 하고 대북 제재 레짐의 강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동기는 크게 감소시킬 것임
- 중러와 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적어도 중러가 북한과 협력구조로 전환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급선무
- 신냉전 구도로 가면 향후 중러의 북한에 대한 재래무기 지원 가능성도 존재. 중러에 대한 설득과 국제 여론 공조로 이를 억제하고 차단하여야 함.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보가 중요

문제 제기

1.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이유 분석

시진핑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타격을 안겨 준다는 점이 현 상황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 시진핑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 이미 너무 깊이 개입하면서 수차례의 공개 경고를 함. 그러나 사드 배치과정은 이를 전면 무시하면서, 시진핑의 위신이 크게 손상
- 시진핑은 2015년까지 한국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호감을 바탕으로 내부의 전통적인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대한반도 외교정책의 전환과 친한(親韓)적인 외교를 추진
- 사드 배치 결정이 중국이 미국과 전략경쟁의 강화추세와 남중국해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결정되어 중국에 더욱 자극
- 시진핑이 추구해온 '신형강대국 관계' 외교와 '신형 주변국 외교'의 한 축이 모두 좌초하는 상황이며, 국내정치적으로 권력(당과 군부)의 재편성과정에서 취약해진 시진핑의 권력기반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 되었음
- 현재 사드 강경론의 배후에는 중국 안보라인과 군부가 있음. 사드 문제는 군부의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관심과 군사비 증액을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 시진핑 역시 정치적으로 군부나 안보라인의 견해와 이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가 사드 문제를 더 악화. 미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을 공세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그 중점은 대중국 견제에 있다고 인식

- 미국은 기존 동맹들을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사드는 이 아태 재균형 전략의 일부인 BMD 추진의 한 단계로 해석
- 미·중 사이의 '전략적 신뢰'가 결핍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술적 설명과 사드 레이더(AN/TPY-2) 운영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실상 중국에게는 명분만 생기면 언제나 뒤집을 수 있는 손바닥과 같기 때문
- 무엇보다도 외교 전략적으로 '체스'를 두는 미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전진(배치)과 후퇴(철수)로 인식하지만, '바둑'을 두는 중국은 이를 다음 수를 위한 포석으로 인식

미국 주도의 사드 운용과 기술의 진화성 우려

- 사드 체계가 중국에 근접할수록 중국의 위협인식 강화. 한국에 배치된 레이더는 한국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고, 유사시 대중국용 레이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식
-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BMD 체제의 특성상 1기에 그치지 않고 적어도 2기~3기가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사드 기술 자체가 진화중인 것으로 그 성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인식

비대칭적인 전략균형의 추가적인 악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A2AD 전략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안겨줌

- 사드 체계가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서태평양상의 미국 영토 도서들이나 일본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 및 방어하는 데 유용함
- 양안 지역에서 군사 충돌 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제어할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 공격수단을 크게 제약
- 중국은 최소 핵 억지 전략에 입각해 미국과 비대칭 전력 운용. 추후 지역내 사드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비대칭 역량을 더욱 악화시키고 유사시 미군에 대한 타격 역량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인식

한미동맹의 이완 효과 기대

- 중국은 사드 문제를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전조로 인식
-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을 억지하면서 한국의 보다 중립적인 태도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임

실제 군사적 위협

- 비록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가 종말 단계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백두산 배후 통화시(市)에 배치된 중국 미사일 부대에 대한 탐지 가능성 우려
- 이 기지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운용에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 중 하나인 DF-21D가 배치되어 있다고 알려짐

2. 중국의 대응

중국은 지난 7월 8일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이후, 지도자들 간의 회동, 외교부, 국방부,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우려와 경고 발함

- 21세기 들어 한중 사이의 단일 사안에 대해 중국 매체에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인 없을 정도로 관심 고조
- 사드 배치 시 한·중 상호신뢰 훼손, 사드는 기술적 문제 아닌 전략적 문제, 최종 배치 시 한반도 정세, 지역의 안정 및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한국 측이 중국 측의 우려를 진지하게 대해주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해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요구
- 지난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사드 배치 문제를 심지어 중국의 핵심이익과 연계시킬 개연성도 암시

중국 대응의 한계에 대한 주장과 반론

- 중국의 경제보복을 매우 직접적이고, 파국적 수단에 한정짓는 입장. 즉, 경제보복을 마치 과거 WTO 가입이전 중국과 한국 간 발생한 마늘분쟁 혹은 미국의 대북한 금수조치 혹은 경제제재 등과 같이 전면적 통제와 같은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일은 현재의 한중 경제관계에서 벌어지기 힘들다고 지적. 다음논거로는 한중 간의 경제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서 경제 제재는 중국 경제에 타격을 안기며, 현재와 같이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는 어렵다는 주장
- 그러나 현재 한중 경제는 점차 보완성이 약화되고 경쟁으로 전환 중. 중국이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이제 일본임. 그리고 중국의 내수시장 강화.
- 중국은 대체가 가능한 반면 한국은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상대를 찾기 어려움
- 중국의 군사 개입이나 보복은 단기적인 윤희리(有不利)에 의해 결정하지 않음. 자신들의 논리와 명분이 더 중요
- 현재 경제계가 우려하는 것은 비관세장벽, 합법적 틀 등을 가장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는 행태임
- 일부의 경제보복 가능성 부정은 학문적 주장이라기보다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가깝거나 중국 상황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 지나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근거해 대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중국의 대응 리스트

- 시진핑의 대외정책은 강대국론과 중국의 국가이익 수호 강조. 약소국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손상을 준 핵심현에 대해 다양한 보복조치를 취한 논리로, 한국 역시 중국의 이해에 반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다양한 차원의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임. 향후 다방면에서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위신, 경제적 손실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실제로 손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영역에서 다양한 시차를 두고 의뭉스럽게 대응을 전개할 것임
- 중국의 인민일보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물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실제 지목하여 비판한 것은 의미가 심각함. 중국은 그간 사드배치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및 대응 list에 대한 점검이 끝났으며, 이제 행동에 옮긴다는 명백한 시그널을 대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보낸 것임
-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손실을 주지 않을 영역에서의 경제나 문화교류 부문이 우선 가장 쉽게 보복할 대상일 것임. 동원 가능한 수단이 크게 5가지(비관세장벽, 관광객 축소, 반한감정 고조, 현지진출 한국 기업 표적단속, 금융 수단을 활용한 보복) 가능
- 중국 측 보복은 이미 시작되었음(최근 KOTRA, SERI 내부보고서 참조). 1단계인 언론을 통한 반한 감정의 점진적 고조(중국은 최근 7월 8일~8월 16일까지 사드관련 인민일보 보도 265건, Global Times 보도 56건, 외교부 및 국방부 논평 각각 27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제한, 그리고 인적 교류의 제한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음. 이는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뿐만 아니라 중국 유력인들의 한국 방문 및 회의 개최 등이 다양한 이유로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허가가 나지 않고 있음. 그리고 문화부문의 교류에 있어서도 제한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다음 보복은 보다 본격적 보복-비관세장벽 강화, 엄격한 행정절차의 집행, 통관 및 인허가 절차의 지연과 집행의 지체 등 현상이 나타나고 현지기업 표적단속 등이 강화될 것임
- 만약 현 갈등상황이 증폭된다면, 내년 3월 소비자 날 전후로 방영되는 소비자 고발프로그램(CCTV에서 방송)에 한국기업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하반기 중국의 19차 당대회 전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내년 10월에 한중 통화스왑 협정(2011년 체결, 3600억 위안(64조원) 규모)이 만료. 현재 이를 연장하도록 합의한 상황이나 중국이 이의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음
- 여기서 더 나아가면,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연계되어 있는 방산기업이나 한국 경제의 근간인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취약성을 활용하여 압박하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음
-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그리고 한국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군사적 위협(심리전)은 물론이고, 그간 묵인해 왔던 항공·해양 영역에서의 경제 무효화 조치와 이에 따른 중국 공군과 해군의 우리 영내 빈번한 출몰, 이어도 해상 과학기지의 철거요구와 압박, 남제주해 영역에서의 실효적 지배 조치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타격 및 레이더 역량의 강화 등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드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용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체계의 증강, SLBM 능력의 강화를 통해 사드체계를 무용화할 군비경쟁이 강화될 것임. 실제 중국의 현 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응조치나 이러한 군사 역량구축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뤄질 개연성이 다대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임
- 러시아와 사드 관련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타격을 안기려는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하려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드를 무력화하는 공격능력 구축에 힘을 기울일 것임

지난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사드 배치 문제를 심지어 중국의 핵심이익과 연계시킬 개연성도 암시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위신, 경제적 손실을 크게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실제로 손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영역에서 다양한 시차를 두고 의뭉스럽게 대응을 전개